

# ‘禁域’의 오랜 장막 걷히는 한국의 軍

## 학문적 ‘不可觸지역’ 통념 깨고 연구서 잇달아 출간

바야흐로 세계적인 ‘군축시대’가 도래했다. 유럽통합과 더불어 미·소 중심의 동서냉전 구도가 실질적으로 와해된 지금, 전세계 공동적으로 정치 표면에 떠오른 중요 사안 중의 하나로 ‘인류평화를 위한’ 대대적이고 점진적인 군축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도 그간 금기시 돼온 핵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는가 하면, 북한조차도 핵사찰의 대상에 올라 여하한 방식이든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렇듯 금기의 영역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는 군문제는 대외적 추세에 밀려서라도 앞으로 계속 그 공개 범위가 넓어지리라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출판가에는 우리나라 군문제를 전면에서 비판한 책들이 적잖이 등장해 주목된다.

### 한국군 구조적 문제 폭넓게 다뤄

‘한국군’ 관련서들은 이미 몇년전부터 조심스럽게 선보인 바 있다. 이들은 주로 군비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자료의 제한이라는 한계로 이론적 논의의 수준에 머물러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한반도 군비경쟁의 재인식」(하영선 엮음, 인간사랑) 「한반도의 군비통제」(신정현 지음, 예진출판) 「한반도 군축과 사회복지」(평화연구소·중앙대사회복지연구원 지음, 한울)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로 그동안의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한반도 군비경쟁의 재인식」은 한반도가 국제 군사질서의 첨예한 대립의 격전장임을 전제로, 군비경쟁의 배경과 실상을 국제체제·남북분단체제·국내체제의 세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지난 88년에 출간돼 특히 국제정세 분석에서 다소 시의성을 잃고 있지만, 남북간 군비경쟁에 대한 소장학자들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한반도 군비통제의 일반이론과 사례를 소개한 군사학 이론서로 국내 상황에 보다 적합한 군비통제의 이론적 모형을 모색하는 데 무게중심이 놓여 있다. 「한반도 군축과 사회복지」는 군축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능성을 타진한 일종의 사회학서. 남북한의 군비가 축소되고 그 경제여가 사회복지로 환원된다면 일련의 평화통일운동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한반도에서의 군축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조심스럽게 선보이기

시작한 군 관련서들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군의 체질개선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군개혁을 통한 효율적인

군운용을 주장하고 있는 이 책들은

그간 접하기 어려웠던 관계자료의

제시와 함께 이를 토대로 한 이론적

대안까지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군축에 따른 남한 정부예산의 잉여규모 추계와 사회복지의 발전 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비록 군문제에 대한 제한적인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군 관련서들은 국회예산심의 때나 그 규모나 세부 사업사항이 일부 드러났던 군 내부의 실체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는 점에서 이후 군 관련서들의 활발한 출간에 자극제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군 관련서들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군의 전반적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단순한 이론적 논의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교 출신의 ‘민간인’ 저서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육사 22기 육군대령으로 지난 87년 예편한 지만원씨의 「70만 경제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김영사)와 그 개정증보판인 「군축시대의 한국군,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진원), 그리고 예비역 해병대령인 이선호씨의 「한국군 무엇이 문제인가」(팔복원) 등이 군출신 군사전문가의 책들로 꼽힌다. 이 책들은 저자들의 오랜 군경험을 토대로 군 행정과 조직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며 이와 관련된 알려지지 않았던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어 흥미롭다.

상·하 두권으로 된 「군축시대의 한국군,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는 현재 우리 군의 비효율적 운용을 ‘시스템분석’이라는 경영학적 측면에서 분석,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군예산의 방만한 집행의 예를 세계 방위산업의 현황과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그것을 비교함으로써 극명하게 드러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방위산업은 중복투자와 기술미비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엄청난 값



현재 서점에 나와 있는 군 관련서들.

에 들은 부품으로 조립한 장갑차와 통신장비가 아직 단순조립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국내 기술수준 때문에 국산화에 실패, ‘일회용 소모품’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일례에 불과하지만, 이와같은 주먹구구식의 방위산업 운용으로 대표되는 군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저자는 군사정책 및 정부의 리더십문화의 혁신적 개선, 군간부의 ‘쇼미니즘적 정열’의 지양과 군사프로화 지향, 전쟁 수행방법에 대한 국제적 신사고와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른 군의 체질개선, 그리고 국방비의 효율성 증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군 무엇이 문제인가」도 현 군체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군대개혁론’을 담고 있다. 민·군 혼성조직으로서 조직구성원이 전인구의 1.5%를 차지하고 국가 일년 예산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대해진 한국군의 실상을 진단하고, 변화된 안보환경에 걸맞는 건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불필요한 유사·중복 기능부대 및 기관의 편성, 전투임무보다는 비전투임무 부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낭비·비만형 조직, 장성을 비롯한 상위직급의 정원 과다책정으로 인한 불안정·불합리 조직, 지상군 절대우위·해공군 상대열세의 제도적·구조적 편중 등이 저자가 지적하는 한국군의 ‘증증현상’이다.

위의 두 책이 군체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한국의 방위비」(현인택 지음, 한울)와 「군축의 경제학」(이형순 지음, 을유문화사)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한국군을 분석한 연구서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방위비」는 방위비 결정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론들을 제시하

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방위비 결정요인을 70년대 후반과 8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방위비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 논의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북한의 안보적 상충관계라는 두가지 상반된 요소를 감안할 때, 향후 한국의 방위비 수준은 GNP 대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

「군축의 경제학」 역시 방위비 감축을 제안하고 있다. 다가오는 지역분쟁의 시대에 대비해 남북한 군축과 경제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으로, 세계질서가 군사력 대신 경제력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를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제적 패권주의로 인해 수년 안에 남북한 전체의 경제권을 장악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 크다.

### 개혁 통한 효율적 군운용 주장

지난해부터 조심스럽게 선보이기 시작한 이들 군 관련서들은 우선, 군 외부에서의 논의를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했던 그간의 경직된 국내의 상황이 해빙기를 맞음으로써 가능해진 변화 중의 하나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만큼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군의 체질개선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들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결같이 군개혁을 통한 효율적인 군운용을 주장하고 있는 이 책들은 그간 접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군관계 자료의 제시와 함께 이를 토대로 한 이론적 대안까지 모색하고 있어 군 내부에는 애정어린 ‘꿀꺫’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군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신선한 자극제로 받아들여질 듯하다. — 정소연 기자